

## 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6년 10월 28일(금) 조간
담당자	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(044-550-4610, cbkcho@kdi.re.kr) 남진욱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(044-550-4068, namjw@kdi.re.kr)
배포일시	2016년 10월 27일(목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# KDI 북한경제리뷰 (2016년 10월호)

- KDI는 10월 27일 『KDI 북한경제리뷰1(2016년 10월호)』를 발간, 북한경제의 변화와 대북제재에 관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의 주요 논의사항과 향후 국제사회가 가할 수 있는 대북제재를 분석한 논문들을 수록
- ‘북한경제연구협의회’에 참여한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,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,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,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를 논의하고, 대북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
- 전문가 모두 북한경제는 김정은 집권 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 양상을 보였으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함.
  -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경제가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,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은 체제 내 개혁에 머물고 있어 경제

1) 1998년 10월 창간된 『KDI 북한경제리뷰』는 북한경제의 실태, 남북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과 관련한 주요 이슈 분석을 제공하는 월간 학술지

성장에 기본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

-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당국이 시장화 및 기업의 분권화 등을 수용하면서 거시경제 부문은 당국이 챙기되, 미시 부문은 기업에 맡기는 식의 이원적 경제운용을 펴고 있다고 진단
  -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011년 이후 상품수출, 해외노동자 파견 등 여러 통로로 획득된 북한의 외화유입을 최근 북한경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분석
  -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할 경우, 현재 핵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을 민생경제에 투입할지 여부가 향후 북한경제의 변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.
- 전문가들은 북한경제는 더 이상 폐쇄적이지 않고 내수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제제재가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, 우리 정부의 일관성을 띤 뚜렷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주문
-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다음 대북제재는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'민생용'과 같은 구멍을 더 촘촘히 막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실효성 있는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함.
  -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대북제재의 핵심이 중국의 적극적 참여 여부인만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에 맞게 중국을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.
  -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·미·일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봉쇄 수준의 제재는 북한의 외화수급을 막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나 다른 국가,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봉쇄에 참여하기엔 인센티브가 적다고 지적
  -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북한의 품목별 수출입 상한선(quota)을 정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을 제한하는 방안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때 펼쳤던 맞춤형 제재정책을 제안

□ 한바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‘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대북 경제제재의 2차제재 도입에 주는 시사점’ 논문에서 대이란제재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, 대이란제재의 강화방식을 일차원적으로 대북제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

- 대이란제재가 이란과의 핵협상 전개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각국 협조를 통해 이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 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
- 또한 대내외적인 정치상황으로 핵협상에 우호적인 행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
- 그러나 대이란제재의 강화방식을 대북제재에 적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
  - 북한은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교역선을 가진 이란과 달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
  -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해서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더라도, 북한의 1당 독재체제에서는 민의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기제가 없기 때문에 정책변화가 쉽지 않음.

□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‘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대응방향’ 논문에서 북한 5차 핵실험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, 이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 대응방향을 모색함.

- 미중 관계의 갈등과 대립, 북한의 전략적 가치 등 중국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요인이 상존해 중국의 의지와 실행 여부가 대북제재의 관건

- 중국을 대북 압박전선에 동참시키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함.
  - 김정은 정권의 존재 및 불확실성이 중국에도 안보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중국이 주장하는 ‘책임대국론’을 활용하여 북핵문제 등 북한관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부각
  - 북한도발에 대한 선제적 대북압박을 담아서 중국 설득용 로드맵 또는 도발 대 행동의 ‘대차대조표’를 제시
  - ‘민생용’ 여지를 최대한 축소하고, 중국의 북한관광 제한조치와 함께 북한의 대중국 해외인력 송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재에 포함

□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‘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’ 논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를 살펴보고,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

-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한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, 2016년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간극을 보이고 있음.
  - 이는 가까워진 한중관계로 인해 양국이 각각 그려왔던 서로에 대한 ‘희망적 사고’ 간의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
- 향후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① ‘최상의 한중관계’라는 수식어 속에 내재된 희망적 사고를 배제하고, ② 양국 간 대북제재에 관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줄이는 한편 ③ 냉각된 양자관계 속에서 발생한 오해를 분명히 풀어야 함.
  - 한국이 현 상황에서 펼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대북제재의 실효를 위한 중국 압박, 한·미·중 전략대화,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호 지도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음.

□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'향후 대북제재의 방향: 북중교역을 중심으로' 논문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와 향후 대북제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함.

○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민생(livelihood)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예외조항과 중국 지방정부의 낮은 이행력에 있음.

- '민생용'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대중 석탄 및 철광 수출은 제재 이후에도 타격을 받지 않음.

- 제재는 가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지방정부는 특히,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부담스러운 경제주체임.

○ 향후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생용품 인정에 대한 조항을 제거해야 하며, 경제주체들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더 크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.

- 특히 국제석탄 시세가 상승하고 있어 북한의 석탄가격마저 상승한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더욱 약화될 위험이 있음.

□ 임수호 KIEP 연구위원은 '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방안 검토' 논문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이후, 추가적 대북 경제제재의 수단을 크게 외화수급 루트차단과 전략물자 통제체제 강화로 나눠 분석함.

○ 외화수급 루트차단 방안으로 ① 북한 석탄 수출업체와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'민생 목적'의 수출비중을 최소화하는 방법, ② 우회무역 형태로 진행되는 임가공품 무역의 차단, 그리고 ③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해외파견근로 차단 방법 등을 제시함.

- 전략물자 통제체제 강화 방안으로는 ①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과 같은 기존의 수요자(북한) 제재에 더해 공급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, ② 전략물자 거래에 대한 '2차제재'의 실질적 도입, ③ 나라별, 분야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 통제체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할 국제기구의 설립, 그리고 ④ 대북 원유수출 차단이 있음.

□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'북한 해외 무역 네트워크의 진화와 라오닝 홍상(鴻祥)' 논문에서 국제사회의 감시에 대한 북한의 대외 무역전략 변화를 살펴보고, 이러한 변화가 대북제재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함.

- 과거 소수의 내부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5년 이후 해외거점 중심으로 운영되며, 해외조력자와 결탁하여 합법적 무역형태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함.

- 이는 조세피난처나 자유무역지대에 유령회사를 등록하여 국제 감시망을 피하고, 현지기업들과 결탁하여 필요한 전략물자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됨.

- 이러한 방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합법적 기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위험이 큼.

- 즉, 북한의 경제활동이 공식기관에 증거로 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며,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가 발각된 라오닝 홍상그룹이 한 예임.

- 이번 라오닝 홍상 사례는 유엔을 통한 고차원적 정치합의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방법이 아닌, 이미 활용되고 있는 돈세탁과 불법 무역거래에 대한 국제적 사법공조를 통해 대북제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.

□ '경제자료'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정리한 자료가 수록

- 남진욱 KDI 전문연구원은 '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추가 대북제재 관련 언론보도'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가한 대북제재와 5차 핵실험 이후 언론에서 보도한 대북제재 방안을 정리함.

❖ 첨부. 『북한경제리뷰(2016년 10월호)』 목차

❖ 첨부. 『북한경제리뷰(2016년 10월호)』 목차

□ 동향과 분석

- <북한경제연구협의회> 북한경제의 변화와 대북제재  
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,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,  
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,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
-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대북 경제제재의 2차제재 도입  
에 주는 시사점  
한바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
-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대응방향  
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
-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 
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
- 향후 대북제재의 방향: 북중교역을 중심으로  
이종규 KDI 연구위원
-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방안 검토  
임수호 KIEP 연구위원
- 북한 해외 무역 네트워크의 진화와 라오닝 홍상(鴻祥)  
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□ 경제자료

-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추가 대북제재 관련 언론보도  
남진욱 KDI 전문연구원